

이 대통령, 광주특별시만의 차별화된 대학입시 제안

“대학이 학생 자율 선발…교육 특례 줄 수도”

최교진 장관 “연구해 볼 가치 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 특례를 줘 타지역과 차별화된 대학 입시제도를 자율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장관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지역 단위로 자율성을 강화해, 예를 들면 이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생겼는데 색다른 입시 제도를 취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걸 혹시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어 “안타깝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현재로서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중”이라며 “자율권을 줘서 예를 들면 전남광주는 특별시법상 교육도 특례를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또 “강요하자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법의 취지도 있으니까 교육 제도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특색 있게 해보겠다’(하고), 광주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문화를 키워 대체불가 대학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하면 한번 독자적으로 한번 정부의 통제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명했다.

아울러 “물론 광주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로 와서 다른 대학 가는 걸 막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준비하는 다양한 과정에 자율권은 최대한 주려고 하지만 대학 입시 전체에서 (광주특별시만) 특화된 대학 입시는 고민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그곳(광주특별시)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다양한 특색 있는 학교도 고민하고 있고, 또 초중고도 단순한 학교가 아닌 통합을 포함해 새롭게 형성할 메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학교 자체의 입시

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등 특목고 대상 자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되도록 지역협약 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교육 부문에서도 “모든 영재학교

와 과학고에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는 한편 4000여개의 AI 중점학교를 운영하겠다”며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교육 또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AI 시대 역량 함양 및 기초 문해력 증진, 대입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기초 문해력 증진을 위해 읽기·쓰기는 물론 한자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국가교육발전 계획은 올 10월 중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여론 수렴 및 전문가 논의, 속의 토론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폭염·가뭄 비상대책회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오후 광주청사 집무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폭염·가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총력전

민형배 시장 주재 긴급 점검회의…마스터플랜 등 선제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남권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지역의 준비상황,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요건으로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및 재원 조달 확보 가능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명시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비용을 국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입주 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담긴 클러스터 지정요건·절차·지원내용,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현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추진방향,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광주특별시는 서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제1호 조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반도체전략위원회와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확보와 인재 양성 방안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산업통상부 역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임기 내 착공·생산은 목표로 올해 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미 부지와 투자 여건을 갖춘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어 “그동안 마련한 조례와 전담조직, 전력·용수 대책, 인재 양성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메가 프로젝트 점검 2차 회의’ 10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광주 반도체팩 가동 전력·산업용수 확보 방안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특례 등도 논의 전망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각 호남·충청·영남 각 권역별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점검하는 2차 회의가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6일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결정하지 한 달만이다.

이번 2차 회의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권역별 추진 방안과 연내 제정하

기로 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팩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산업용수 하루 65만t 전력과 6.3GW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권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 대표 직속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메가특구특별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메가특구법에 담은 특례 가운데 최근 논란을 빚는 사안은 고소득 연구원과 관리직 직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특례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규제 완화·인프라 조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등 노동권 침해할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번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는 산업통

상부·국방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메가특구법의 입법 방향 등 프로젝트의 윤곽이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고회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산 무안군수 “‘군공항 이전’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

이 대통령 조속 추진에 환영 성명…3대 선결조건 이행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함께 3대 선결조건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산 무안군수(사진)는 5일 ‘광주 군공항 이전 협조요청’에 따른 무안군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당부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대해 무안군은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위한 논의가 한 걸음 진전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3대 선결조건의 이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당시 6자협의체 공동합의사항인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의 이행과 로드맵 제시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안민군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 속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재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3대 선결조건이 내실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변화된 여건에 맞는 충분한 협의와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산 군수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계신 만큼, 무안군 역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은 군민의 뜻을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LH 설계용역 절차 착수…무안군 수용 관건

▶1면에서 ▶ 광주 도심과 가까운 입지도 강점이다.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 유리하고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부지 선정에 이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군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지정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비롯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기반시설 구축 등 여러 절차 등 갈길이 멀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이르면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초 착공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사와 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착

수했다.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용역업체 선정 기간을 58일로 줄여 9월 하순 설계 업체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산단 조성 및 설계용역 착수하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단 조성의 전체 조건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군 공항 이전 예정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이전 대상 지역인 무안군과의 협의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와 지역 부담을 고려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이전지원금 1조원 구제화, 무안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부담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통합특별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사업 추진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